

미래신산업 육성 위한 산업입지 발굴

전북특별법 근거 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구상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입지를 발굴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입지 수급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생태계는 기존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융 복합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5개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또한 소부장,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방위산업, 기후테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바이오 특화단지 등 산업 인프라

형성 및 산업구조 재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업활동의 터전이 되는 산업단지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용역을 통해 첨단산업이 전북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이 원하는 곳에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를 제공하고자 산업입지 수급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안정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산업입지 수요를 추정해 공급규모를 산정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산업입지 발굴을 위한 종합계획은 △시 군별 주요산업 및 산업단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지자체의 산업환경 및 성장 잠재력 분석을 통한 시 군 권역별 · 산업별 발전전략 제시 △지역 산업거점, 배후도시와 연계 및 교통

인프라를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 가능지 발굴 △발굴된 입지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후보지 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공급 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 및 관련 기술의 연구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일반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국가산단과 달리 전북특별자치도 건의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한 국가산단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시 추진 그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구상(안) 수립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방안 마련 및 유치산업 선정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입지 검토 및 선정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기본방향 설정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구상(안) 수립 등 국가산단 개발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김관영 도지

사 취임 이후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첨단기업의 투자 및 입주가 예정돼 있고, 첨단산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기적 ·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산업용지 공급 방안 뿐 아니라 지역 대학,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첨단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구상안 수립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규 국가 첨단산단 지정도도 노력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법 제정 취지에 맞게 타 시도 대비 전북의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차전지 기업의 입주 러시로 새만금 산단 부족 사례를 봤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방안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첨단기업이 전북자치도에 동지를 틀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유역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점검

전북자치도, 24일까지 2주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유역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시·군, 전북환경청, 환경공단과 함께 갈수기 대비 가축분뇨 무단 방류,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소재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고농도의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할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특히 강수량이 적어 하천 수위가 낮은 갈수기에는 소규모의 수질 오염원에도 큰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갈수기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한다.

축산농가, 재활용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 상습 민원 유발 및 하천 인근 시설,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 또는 불법 야적 및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 처리시설의 경우 오염도 저감을 위한 방류수 희석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도 상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불법 숙박영업 근절 위해 일제점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2달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경찰·소방 등이 함께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안 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숙박업 의심업소 및 민원 발생업소 등이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의 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또한 함께 살핀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시군 농생명·바이오 기관 '6+1 협력 모델' 만든다

전주·정읍·진안등6개연구소와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모델을 만든다. 전북자치도가 도내 농생명·바이오 혁신기관 간 상호협력력을 위해 도와 시군 농생명·바이오 혁신기관 협력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과거 10여 년 전 중단된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시군 연구소 간 '1+5 협의체'를,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내 '6+1 협의회'로 확대·복원하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6개 시군 연구소 중 5개소(전주, 진안, 임실, 고창, 순창)는 2011년부터 산업부의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전국 19개소 선정)으로, 정읍 농축산용미생물센터는 농식품부 공모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순창 발효미생물진흥원과 정읍 농축산용미생물센터는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의 미생물 분야 전국 거점으로 발돋움해 관련 기업의 R&D 및 실증, 제품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그 외 기관 또한 홍삼, 복분자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식품, 농생명 소재 기반 연구, 제품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9일,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



지난 9일,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시군 농생명·바이오연구소 6개소와 '2024년 시군 농생명·바이오 혁신기관 간담회'가 개최됐다.

융합산업진흥원, 시군 농생명·바이오 연구소 6개소의 기획실장과 R&D 49건, BIR&D 26건 등 기관별 올해 중점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2025년 이후 기관별 중기 계획, 시군 연구소 애로 사항 등 상호협력 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올해 '농생명·바이오소재기반산업화기술촉진지

원사업'을 순창, 고창 등 4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시군 연구소 간 네트워크와 다양한 협력방안을 이끌어 낼 협의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연구소 직원의 역량과 동기부여 강화 및 국가 사업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시군 연구소는 지역 농생명·바이오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거점 기관이다"고 강조하며, "다시 새롭게 가동한 '6+1 협의회'의 취지를 살려 농생명·바이오 역량을 연계하고 실무연구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수거실태 합동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8일까지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수거·실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된 후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부터,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2년 12월 계도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의무화됐다.

이에 합동 점검단은 전북자치도 내 공동주택 35개소, 단독주택(개별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상가) 15개소를 방문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및 조

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 설치여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홍보 추진여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계약서상의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무색 투명한 생수 또는 음료 페트병만 해당되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 뚜껑을 닫아 반 플라스틱과는 별도로 배출해야 재활용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로 활용된다.

전북자치도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까지 집중 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